

이주배경학생 지원 한국어 교육 앱 개발

지역 특화 콘텐츠·AI 기능 등 갖춰…4개 언어 지원

광주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앱을 개발했다. 시교육청은 22일 광주 하남중앙초등학교에서 교원·교육전문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한국어교육 앱 개발 완수 보고회를 가졌다.

광주형 한국어교육 앱은 이주배경학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다양한 언어권 학생들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한국어교육 앱이 교육 위주로만 진행되던데 반해 광주형 한국어교육 앱은 지역 역사·문화유산·지형·인물·사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광주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하며 학습

여희 717개, 도입부 143차시, 학습 콘텐츠 20개를 담았다.

이 밖에 자동 번역·다국어 음성 모듈·말하기 및 발음 평가·한글 필기인식·AI 대화연습 등 인공지능 기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교사들이 학습 꾸러미를 구성해 학생 맞춤형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정착을 위해 맞춤형 언어교육 지원, 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 취학, 학습지원, 심리·정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생활교육·학습 이해·가정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통·번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시작한 통·번역서비스는 첫 해에 474 건, 2024년 533건을 지원했다.

/조선주 기자

광산구, 유기견 임시 보호비 지원

최대 25만 원…유기동물 보호·입양 활성화

광산구 유기견 보호와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 임시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동물보호센터(북구 본촌동)에 입소한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며 유기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산책·놀이,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한 입양 홍보에 참여한 시민에게 보호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민 참여로 유기·유실된 동물에게 휴식과 회복을 위한 안정적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산구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50일간 임시 보호 시 마리당 최

대 25만 원까지 보호 비용이 지원되며, 동물병원 진료·치료비는 제외된다.

임시 보호를 희망하는 광산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광주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임시 보호가 종료되면 광산구는 동물 보호 상태와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보호비를 지급한다.

유기동물 임시 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062-960-36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서구, 청년 자립·성장 지원 'PI스쿨'

청년 190명 진로·취업·실무역량·취미활동 등 지원

서구가 '2025년 청년 PI(Personal Identity)스쿨'을 본격 추진하면서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PI스쿨'은 진로, 취업, 실무, 취미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해 청년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진로 설계를 돋기 위한 것으로, 광주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19~39세) 19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진로설계 과정은 지역 최초로 도입한 갤럽 강점검사 기반 라이프코스 진행되며 취업역량 과정은 취업 마스터 필기형(NCS 기반 문제풀이 중심), 취업마스터 면접형(자소서 작성, 모의 면접, 이미지 메이킹 등)으로 구성돼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실무역량 과정은 디지털 협업 도구인 노션을 배우는 역량UP

노션과 금융·경제 기초 이해를 돋는 역량UP 경제 강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걱정인형 만들기, 해변 캠핑 만들기 등 주제와 결합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해 청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표현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진로, IT, 문화예술,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강사로 참여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청년재능공유스쿨'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강의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돋고자 마련됐다.

과정별 모집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062-360-7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주 기자

북구 '찾아가는 호신술 교육' 모집

여성·이동·청소년 자기방어 기술…25일까지 선착순

북구가 여성·아동·청소년 등 범죄 대응 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호신술 교육을 제공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호신술 전문가의 지도하에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방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위기탈출 안심 호신술 배움터'의 참여자를 오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북구 여성행복응원 네트워크의 정책 포럼에서 최초로 제안되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찾아가는 교육 ▲소규모 그룹 교육 ▲참여형 실습 중심 교육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상황 대처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0회의 호신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북부 경찰서의 범죄 예방 방법 및 심리적 대처법 등 이론교육을 먼저 제공한 후 호신술 전문가의 실습 및 응용형 교육을 진행해 수강생들에게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이동기 기자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전범기업 손배 일부 승소

"국제송달 지연 따른 상속분 소멸시효 완성" 아쉬움 주장도

일제 강점기 탄광 강제 노역으로 온갖 고초를 겪다가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동원 피해자 3명의 유족이 니혼코크스공업(옛 미쓰이광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막았다.

재판장은 '피고인 니혼코크스공업 측은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3명의 유족 3명에게 상속분에 따라 위자료 각각 476만1904원, 1454만5454원, 2857만1428원과 위자료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니혼코크스 공업 측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니혼코크스 측이 주장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시효 완성)

은 원고 본인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배척한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 본인 상속분에 따른 위자료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현지 사망 여부에 따른 원고 측 정 구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속분을 상제해 원고별 위자료를 정했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 원고들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41년 8월부터 1944년 8월 사이 일제에 의해 끌려가 일본 현지 미쓰이비바이·스기나와 탄광 등지에서 노무자로 고초를 겪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채굴 작업 도중 석탄을 끌어올리는 기계의 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으로 일본 현지에서 숨졌다.

유해는 화장한 직후 1944년 고국으로 송환됐다.

다른 피해자는 일제 징용령에 내려 지자 형을 대신해 끌려갔다가, 탄광 붕괴 사고로 다리와 갈비뼈를 다쳤다. 일제 패망 이후 가까스로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징용 기간 중 그의 아내는 환병을 끝 이기고 나무 기둥이나 벽 등지에 스스로 머리를 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고통 속에 살았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폭행 등 모진 처벌을 당하고 임금도 거의 받지 못했고 해방 직후 귀국했으나 허리 부상 후유증 탓에 생계를 어렵게 꾸리다가 숨졌다.

피해자 중 1명은 채굴 작업 도중 석탄을 끌어올리는 기계의 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으로 일본 현지에서 숨졌다.

니혼코크스 측은 "원고들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미쓰이광산에 강제 징용됐다는 사실을 일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장은 대체로 받아들였지 않았다.

선고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팔이자 소송 원고인 이길자씨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아버지가 몸을 크게 다치고 굶어 죽을 뻔 했다고 했다. 아버지의 징용 이후 어머니도 횃병에 걸려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등 고생이 많았다"며 지난 세월의 고통을 토로했다.

이언 일제강제동원원민모임 이사장은 "일본 정부가 소송 서류 국제 송달에만 3년여 가량 걸면서 일본 기업 측 법률대리인 선임부터가 늦어졌다. 판결문을 보면 법적으로 파져 봐야겠지만, 일본 측 소송 지연 때문에 일부 상속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김도기 기자

'원만한 분쟁 해결 기대' 광주고법 신임 조정위원 위촉

광주고등법원이 3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를 안배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신규 조정위원으로 위촉, 원만한 분쟁 해결이 기대된다.

광주고등법원은 22일 신규 조정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위촉 조정위원은 30대 청년 문화기획자, 육군 법무참모, 40대 쉐프 겸 외식업 경영인, 건축사, 50대 화가, 천주교광주대 교구법원 근무 수녀, 대한불교계종 종사 스님 등이다.

특히 이번 조정위원의 평균 연령은 46.4세로 기존 광주고법 조정위원 33명의 평균 연령보다도 낮다. 신규 위촉 위원을 비롯한 광주고법 전체 조정위원 40명의 평균연령은 58.1세로 기존보다 2살 낮아졌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이 우선 보장되며 재위촉 주기(2년)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대 75세까지 조정 위원으로 일할 수 있다.

신임 조정위원들은 각자 전문성을 발휘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종교인들은 감정싸움 양상으로 흘릴 수 있는 사건을 도맡아 효율적이면서도 상호 민족하는 조정 결과 도출에 힘쓴다.

목포 항포구서 폐기물

불법투기…70대 선원 입건



목포 항포구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70대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바다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목포시 남항부두 주변에 정박한 500t급 부선에서 폐철가루와 폐콘크리트 잔재를 5kg을 투기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선박에서 용접 등 수리작업을 진행하다 나온 폐기물을 허가없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항포구 순찰 활동 중 A씨의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하고 적발했다.

해경은 A씨와 선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폐기물을 투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시, 다중이용업소 화재 취약 외장재 교체·스프링클러 지원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84개 건축물 보강 완료

광주시가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에 타기 쉬운 건축물 외장재를 교체하고 스프링클러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에 타기 쉬운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업 의무대상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보강대상·범위, 보강 방법,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규모 등을 안내해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대상 건축물은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차별을 피할 수 있다.

광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84개 건축물이 보강을 완료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전남, 소비자와 함께 '남도종 마늘 산업 활성화' 협의

소비행태 변화·산지 중심 유통체계 개선 등 머리 맞대

남도종 마늘 생산농가·소비자 상생방안 간담회

2025. 4. 22.(일) 14:00~15:00 | 농협전남지역본부 회의실(4층) | 전라남도 | 대전국민농협전남지부



전남도는 22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서 남도종 마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열어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기온이 따뜻한 전남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마늘 품종은 남도종과 대서종으로 나뉜다.

남도종 마늘은 알싸한 매운맛이 강

하고 저장성이 좋아 김장김치 양념에 이용되고, 대서종은 보다 딜 매운맛으로 생식용에 많이 쓰인